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 ~ 2023]

2019. 2. 12.



보건복지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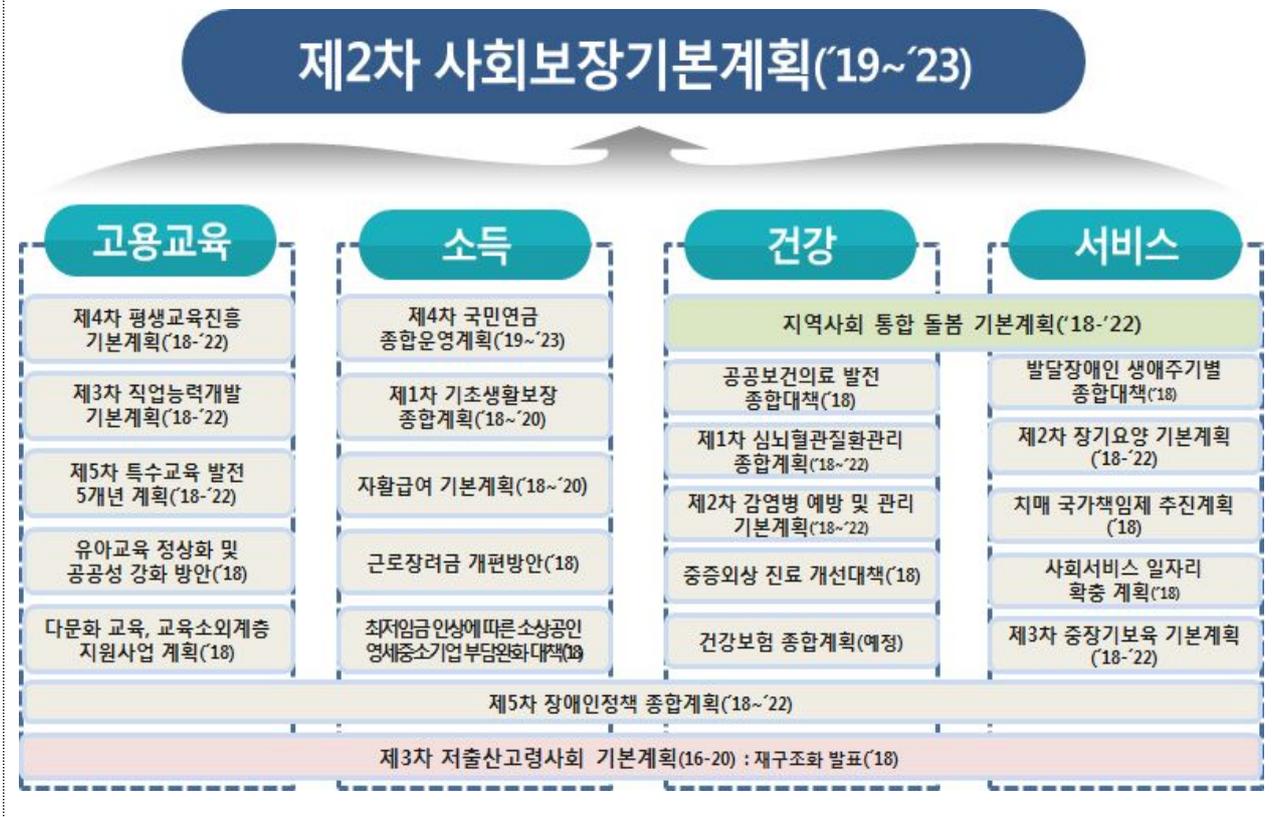
I. 수립배경	1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배경 / 1	
2. 한국사회 현실 진단 / 5	
3. 그간의 정책평가 / 6	
II. 향후 정책환경 전망	9
1. 경제·사회구조 변화 / 9	
2.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과 욕구 / 11	
III.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과 전략	12
IV.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20
V.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21
1. 고용·교육 보장 분야 / 21	
2. 소득 보장 분야 / 25	
3. 건강 보장 분야 / 27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 30	
5. 추진기반 분야 / 33	
VI.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36
VII. 향후계획	36

I. 수립배경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19년부터 적용할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 각 부처의 사회보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될 필요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도 >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과의 비교

- (전략) 1차 기본계획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

⇒ (2차)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 강화,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체계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과 체감도 제고

- (목표·과제) 1차 기본계획은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평가

⇒ (2차) 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90개 설정

<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

구 분	제1차 기본계획('14-'18)	제2차 기본계획('19-'23)
비 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전략	-	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 ②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 ③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 ④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	국민 삶의 질 향상 OECD 20위('23) → 10위('40)
정책 지표	- ▶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 (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 ▶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과제수	▶ 약 200여개 과제	▶ 90개 핵심과제
실행력 강화 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 4대 정책영역 제도평가 실시 ▶ 기본계획 보완·환류(2~3년 주기)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성과분석 >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점검 및 목표달성도 분석

○ 추진경과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문화·환경 등 **소 사회보장 영역에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기본계획 수립('14.8)

○ 성과분석 결과

▲ 기본계획 상에서 제시된 목표 중 다수 미달성

- 세부사업이 200여개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정책목표와 과제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도 발생

▲ 일부 목표는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국민 삶의 결과 직접 연관되지 못함

- 보육료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 투입지표의 개선은 뚜렷한 반면, 청년실업률, 평생학습참여율 등 결과지표는 목표치 미달

○ 개선방안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사회보장 제도평가 강화**

< 제1차 계획 지표 달성수준 분석('18년 말 기준) >

구분	지표명	출처	'14년	목표 ('18년)	현 황
총괄	공공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OECD('18년)	9.6%	12%	11.1%('18년, 잠정)
고용·교육	평생학습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 ('12년)	35.6%	40%	35.8%('17년)
	보육료 지원대상	복지부('12년)	128만명	139만명	145만명('17년)
	육아휴직자 수	고용보험DB ('13년)	7만명	10만명	9.9만명('18년)
	고용률(15~64세)	통계청('13년)	64.4%	70%	66.6%('18년)
	청년실업률	통계청('13.5월)	7.4%	6%	9.5%('18년)
소득보장	65세 이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통계청('13년)	48.1%	40%	46.7%('16년)
	국민연금 수급률	복지부('12년)	28.2%	33%	41.6%('18년)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복지부('12년)	28%	40%	34.4%('17년)
건강보장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	OECD('11년)	35.2%	33%	36.8%('15년)
	건강수명	WHO('11년)	71세	75세	73.2세('15년)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복지부('10년)	5.8%	7%	7.4%('15년)
	행복주택 공급	국토부('13년)	0.04만호	14만호	15.6만호 공급('18년)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과 >

- 사회보장 중장기방향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 수행
 - ▲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보건사회연구원) 실시(‘17) 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연구결과 논의(‘18.2.9.)
 - ▲ ‘2018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실시(보건사회연구원, ‘18.6~10월)
 - ▲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18.4~12월)
-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보장 2040·기본계획’ 추진 기획단(단장: 복지부차관) 구성·운영
 - ▲ 기획단 출범회의(‘18.5월), 전체워크숍(‘18.7월)을 통해 중장기 방향, 중점추진 과제 등 발굴
 - ▲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4개 분과별 회의를 통한 세부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18.10~11월)
- 연구수행 및 기획단 운영 과정에서 사회보장포럼,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실시
 - ▲ ‘사회보장 2040’ 포럼 운영(‘18.4~7월)
 - ▲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의견수렴(‘18.10월)
 -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8.12.18.)
-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19.1.22.), 실무위원회(‘19.1.24.), 본위원회(‘19.1.31.) 심의

- (낮은 국민행복 수준) 경제적 발전(GDP 순위 11위, IMF) 대비 사회부문 투자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

* OECD 삶의 만족도 지수(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17년) : 38개국 중 2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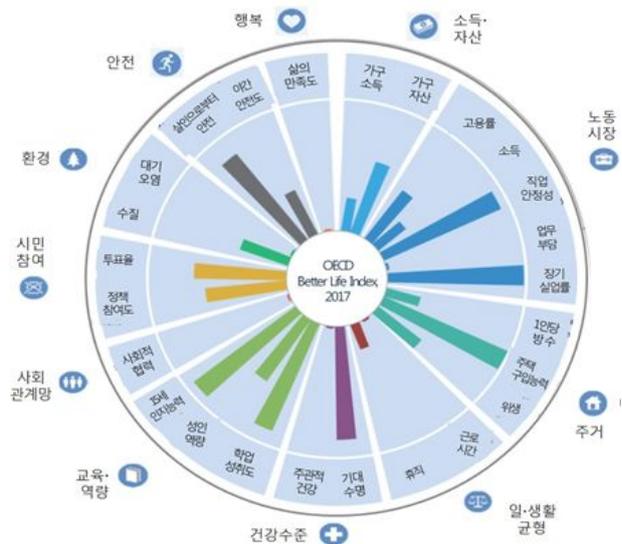
- 15세 인지능력·학업성취도 등 교육역량 분야, 장기실업률, 안전 및 기대수명(82세) 등의 지표는 긍정적이나,
 - 근로시간 과다(36개국 중 34위, OECD), 낮은 사회적지지·협력(38개국 중 38위, OECD), 삶의 만족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다수 존재

<경제-사회지표간 격차>



출처 : 정책기획 위원회(2018)

<2017년 한국사회 분야별 삶의 질>



출처: OECD

- (지속가능성 문제)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증가

- (저성장) 지체된 혁신으로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및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심화

* 연평균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6.9%(‘91~’00년)→4.4%(‘01~’10년)→2.9%(‘11~’16년)

- (인구고령화) 출산율 급락*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구조 고령화 가속

* 연도별 출산율(출생아 수): 1.17(‘16년, 40.6만)→1.05(‘17년, 35.8만)→0.97(‘18년(예상), 32.5만)

- **(사회적 연대 약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세대별·성별 격차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 증가**
 -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근로빈곤 심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조세 및 사회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흡****
 -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6.91('15) → 6.98('16) → 7.00('17)
 - ** 조세와 사회지출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15년) : 한국 13.5%, OECD 32.4%
 - **(격차확대)** 노인빈곤*, **성별임금격차****, 청년실업률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여 사회통합 및 연대 저하 요인으로 작용**
 - * 노인 상대빈곤율('15년) : 한국 45.7%, 미국 20.9%, 독일 9.5%, OECD 12.5%
 - ** 성별 임금격차('16년) : 한국 36.7%, 미국 18.1%, 독일 15.5%, OECD 13.8%
 - **(성평등)** 젠더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커진 반면, 남·녀간 **인식격차*** 존재
 - * '16년 실태조사 : 청년중 불평등 답변 비율(여성 81.9% vs 남성 35.9%)

3

그간의 정책평가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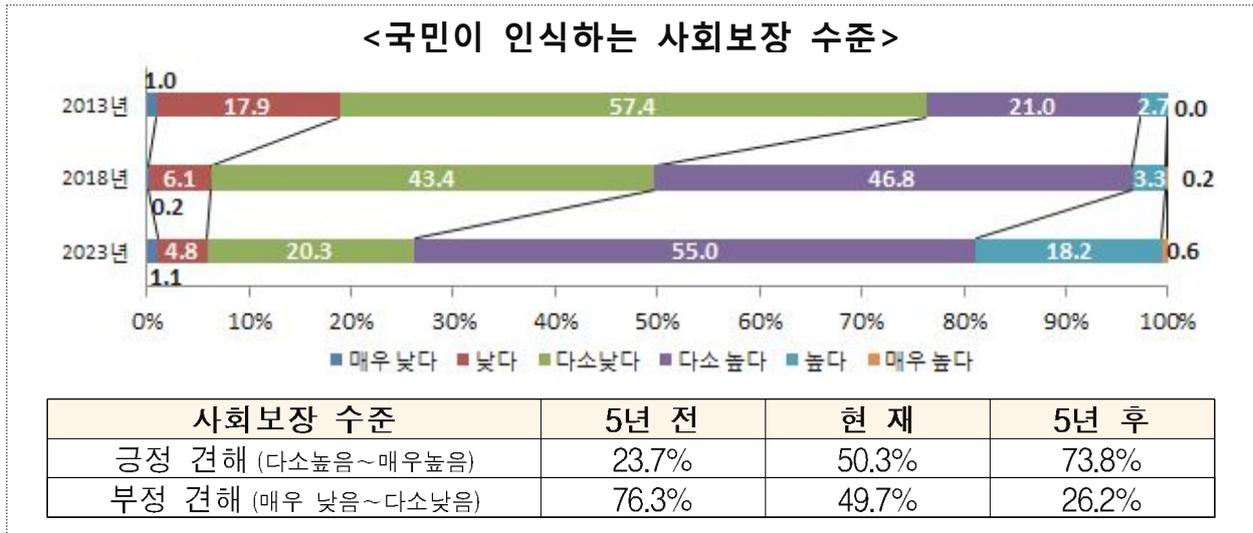
- ① **(복지국가의 기본 틀 마련)**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 대부분 도입**
 -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비용 효과적 의료체계 구축 및 건강지표 개선**
 - * GDP 대비 의료비 지출(7.6%)이 OECD 평균(8.9%)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과 암 사망률 등 건강지표 우수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년), 근로장려세제 도입('08년), 취업성공패키지('09년) 기초연금 도입('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15년) 등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행('07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년) 등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 0.4%('00년) → 7.4%('15년)
 - 무상보육 실시('13년), 아동수당 도입('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18년) 등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0~2세 어린이집 이용률 : 9.4%('01년) → 66.4%('16년)
 - * 3세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28.2%('01년) → 93.2%('16년)

② (빠른 사회지출 확대) OECD 평균 두 배 수준의 빠른 지출 확대*

* 연평균 사회복지지출 증가율('05~'15) : 한국 11.0%, OECD평균 5.3%

③ (국민들의 평가)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1-6점 척도)은 과거(5년 전) 3.07→ 현재 3.48→ 미래(5년 후) 3.86점으로,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전망 (보사연, '18년)



□ 한계 및 당면과제

① 사회지출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OECD 평균의 53.7%('15년)*로 여전히 낮음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15년) : 한국 10.2%, 미국 18.8%, 독일 24.9%, OECD 19.0%

- 성장 우선 패러다임(先성장 後복지)으로 사회투자에 소극적, 선진국에 비해 약 40~50년 복지지출이 지체됨*

*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10% 도달연도 : 한국 2015년, 미국 1970년, 일본 1980년, OECD 1966년

- 현재 사회지출 규모는 경제규모·성장률·인구고령화 등 요인을 고려한 국제비교시 적정수준 대비 약 52~68%에 불과

-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40.6%)도 OECD 평균(56.4%)의 72.0%에 불과

* 주요국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15): 미국 71.8, 독일 67.2, 일본 71.4

② 사회보장 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존재

-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 중위소득 40%이하 약 93만명으로 추정('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사회보험) 국민연금의 장기체납, 납부예외*에 따른 미수급자 및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 존재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18년) : 359만명(전체가입자 대비 17.0%, 지역가입자 대비 48.1%)

** 고용보험 가입률('17년) : 정규직 85.9%, 비정규직 44.1%

③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성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16년, 62.6%; OECD 80%), 실업급여의 부족한 지급 수준 및 기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16년, 39.3%; OECD 40.6%)등

* 실업이후 5년간 총가처분소득 대비 실업급여 총액 비중('15): 한국 10.3%, OECD 28.8%

④ 민간 중심 공급·이용체계*(주거·요양·돌봄·보육 등)로 서비스의 질이 낮고,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에 한계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가 **병원·시설 중심**(병원·시설생활 노인 49.8만명, '16.12월)이고, 재가서비스도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한계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중 국공립 비중('17): 성인돌봄 3.6%, 보육 8.9%, 건강 13.7%

⇒ 대부분 국민이 사회보장확충에는 찬성하나, 이를 위한 추가부담에는 소극적

<참고>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 ▶ 국민들의 사회보장 확대 찬성의견은 80% 수준인 반면, 이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은 32%에 불과*

*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사연)

<사회보장 정책 확대 찬성여부>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부담 의향>



II. 향후 정책환경 전망

1 경제·사회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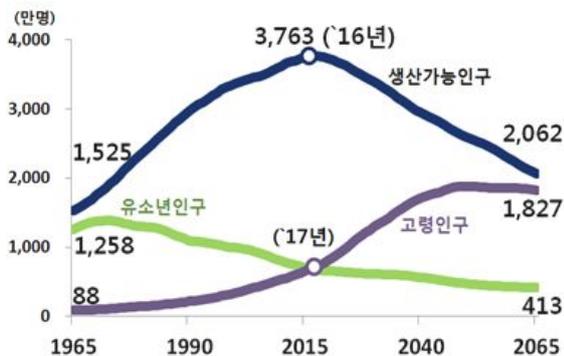
□ (인구·가족) 고령화 심화 및 가족기능 약화

-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1인가구의 비중** 증가로 가족내 부양능력 저하

* 생산가능인구(15-64세) 전망(만명) : 3,763 ('16) → 3,387 ('30) → 2,943 ('40) → 2,062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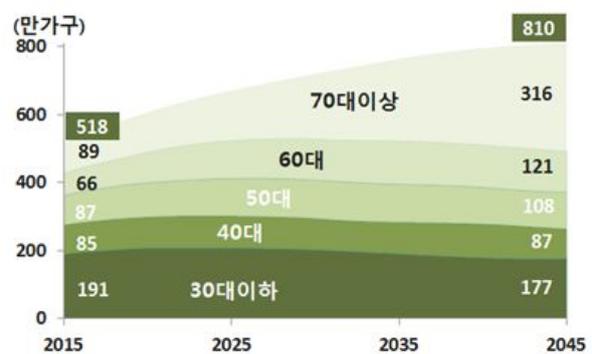
** 1인 가구 비중(%) : 27.2 ('15) → 31.9 ('25) → 34.6 ('35) → 36.3 ('45)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전망>



출처: 통계청(2016)

<1인 가구 연령별 규모 전망>



출처: 통계청(2017)

-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성과 성차별적 고용여건 개선 등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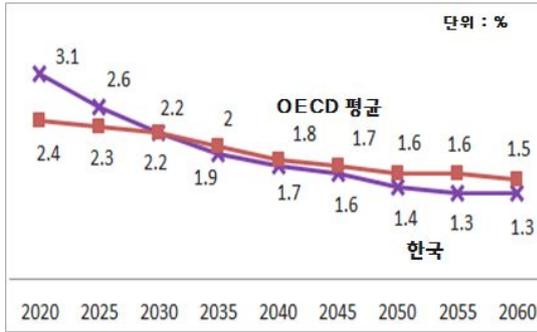
⇒ 사회서비스 확대 및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포용성 제고 필요

□ (경제·산업)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 저하 전망

- (대내요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잠재성장률 저하 전망
- (대외요인)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 및 글로벌 경제 강국의 다극화 등 대외 불안요인 증대

⇒ 경제활동참여 확대, 창의적 인재교육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OECD(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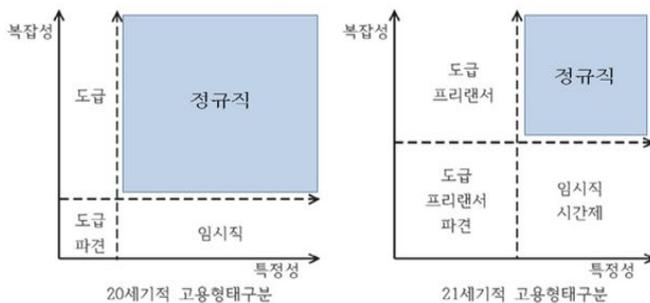
<미래 세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출처: Global Institute(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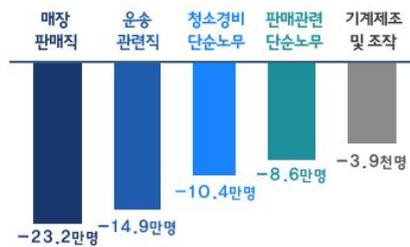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고용구조 및 근로형태의 다양성 증가, 노동이동 확대
 - 자동화·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 등에 따른 고용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
 - 신기술·산업 등장의 가속화, 대외 경쟁력 확보 부문의 변화 등으로 일부 직종·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의 기술발달은 헬스케어의 비약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술변화와 고용형태 전망>



출처: 남성일(2016), 제4차산업혁명의 일과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체 가능 상위 5대 직업군>



출처: 고용노동부(2018)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고용보험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필요**

- (네트워크 사회)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새로운 소통방식 확산
 -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 참여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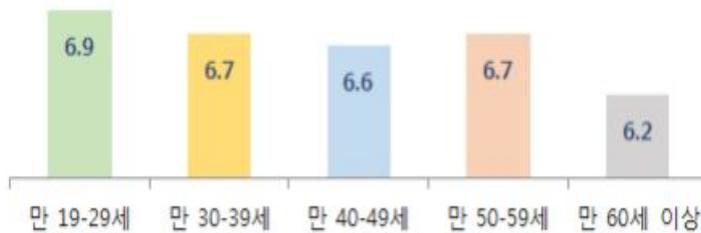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과 욕구

※ 보건복지 관련 환경 및 욕구 분석을 위한 2018년 사회보장 인식조사 결과

- (삶의 만족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6점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40대와 60대 이상에서 낮게 나타남 (0~10점 리커트 척도)

* 조사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0~10점 중의 수치로 답변(수치가 높을수록 만족)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수준은 40대가 낮은 U자형이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는 60대이상에서 낮아지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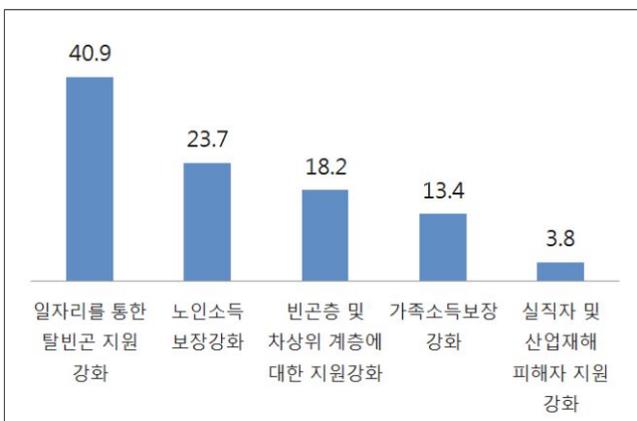
- (걱정거리) 현재 걱정거리는 일자리(35.9%) > 신체·정신건강(17.1%) > 노후생활(15.0%) > 자녀교육(14.2%) 순으로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 30대와 50대는 일자리, 40대는 자녀교육, 60대 이상은 노후생활과 건강을 가장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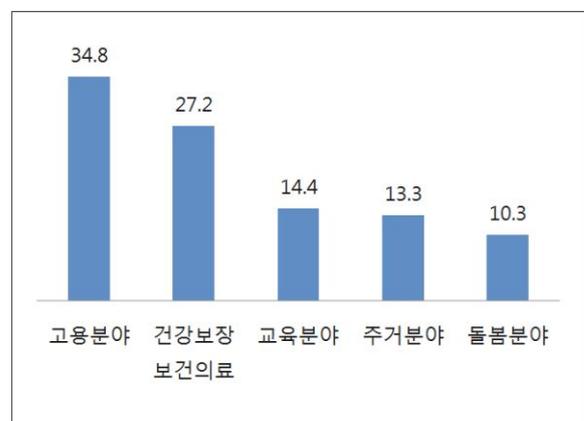
- 5년 후 걱정거리는 노후생활(22.3%) > 신체·정신건강(21.0%) > 일자리(20.1%)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 선호정책) 향후 5년간 중점추진 정책으로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소득보장분야)과 일자리(서비스보장분야)를 가장 선호

< 향후 5년 중점 소득보장 분야 >



< 향후 5년 중점 서비스보장 분야 >



⇒ '일자리'와 '노후생활보장'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정책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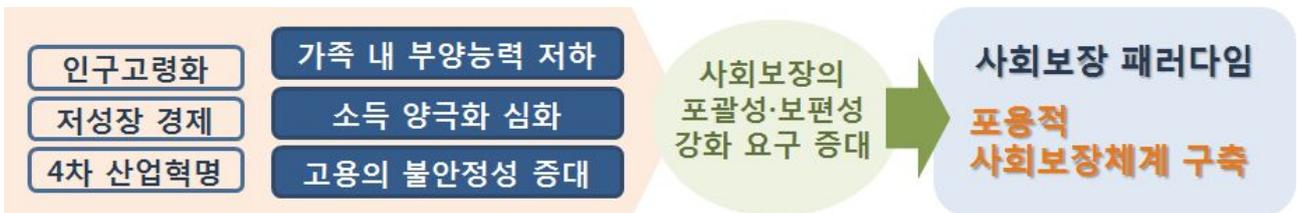
Ⅲ. 사회보장의 장기 비전과 전략

1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사회보장의 체감도 저하
⇒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필요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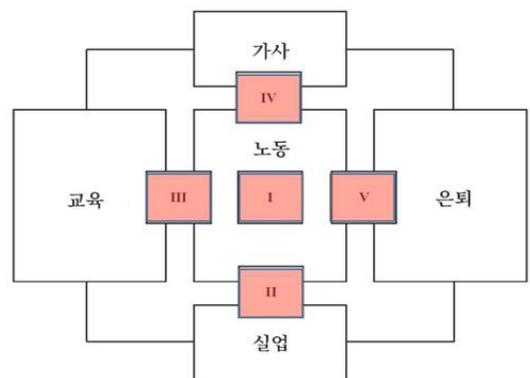


- 복지욕구 증대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등 재정악화 요인도 증대
⇒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효과성·효율성 제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노동·소득·교육·건강 격차확대는 사회 통합성 저해
⇒ 삶의 핵심 영역별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 구축 필요

* 노동(실업), 소득(은퇴 및 빈곤), 건강(질병), 교육(격차) 등

<참고> 생애주기별, 핵심영역별 위험과 사회보장

- ① (노동) 노동시장에서의 격차해소와 평생 학습·훈련체계 구축
- ② (실업) 실직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
- ③ (교육) 인적자원의 역량제고와 창의적 인재육성의 교육체계 구축
- ④ (일·생활) 보편적 소득·건강보장체계 구축과 돌봄서비스 확충
- ⑤ (은퇴) 안정된 노후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



자료: G. Schmid(1998)

* 이행노동시장모형

2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장기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
-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

3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및 전략

①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 (포괄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소득) 비수급 빈곤층 해소-공적연금 확대, (고용) 고용·산재보험 및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보편성)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
 - * 보육지원, 아동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등 확대
- (공정성)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
 - * (고용)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교육) 교육비 부담완화, 기초학력 보장 등 공적책임 강화, (성별) 온종일 돌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②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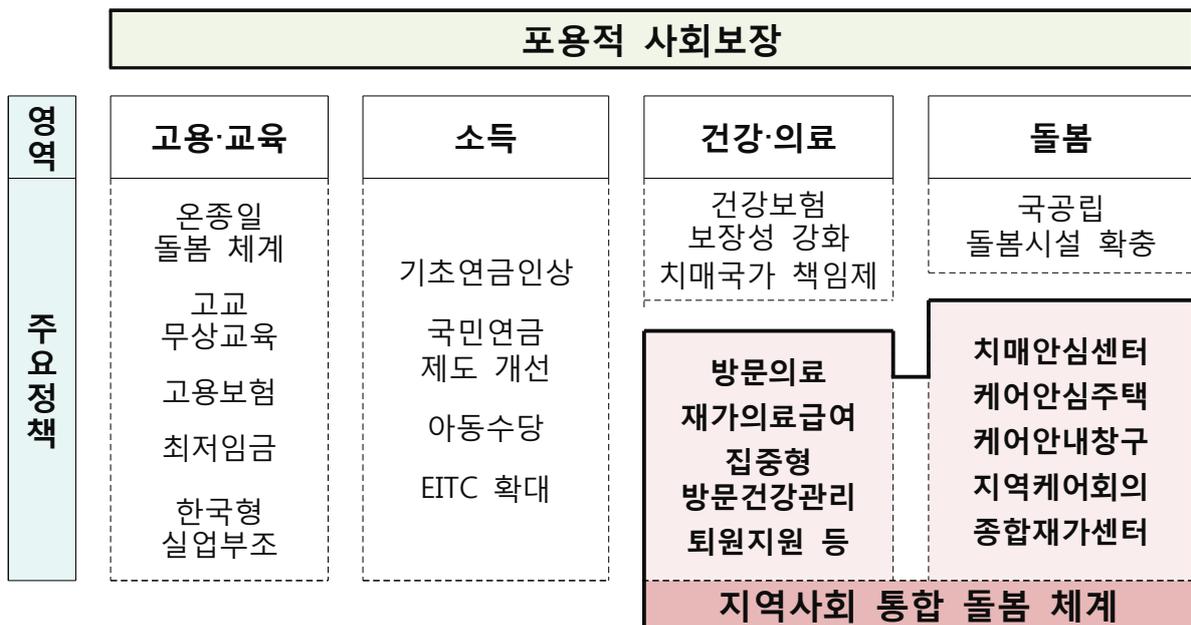
- (제도)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노후소득보장** :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간의 연계성 제고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 고용보험, EITC, 자활급여(기초생활보장) 등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건강보장**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보장 패러다임 재정립,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장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 :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서비스 간의 통합성 제고
- **(추진체계)** 부처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 고도화**
 - *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치 강화방안 마련
 - ** 핵심과제 중심으로 중간점검 및 사후 평가 실시, 차년도 계획과 연결되는 환류구조 구축

③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필요
 - ⇒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로 패러다임 재정립**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범주 >



<참고> 통합 돌봄 경제(Care Economy)

□ 개념 및 특징

- (개념)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

<통합돌봄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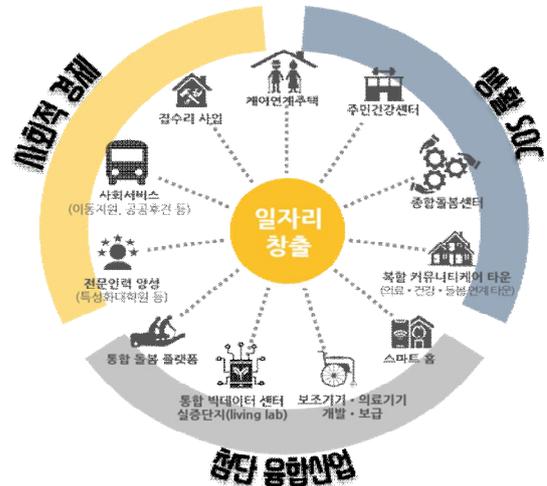
○ 특징

- ①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

** 선진 7개국 GDP 2% Care Economy 투자효과: 일자리 21백만개 창출, 인구고령화 및 경제성장 지체 극복(미국 13백만, 일본 3.5백만, 독일 2백만, 영국 1.5백만 등) (ITUC*, '16)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② 돌봄 서비스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를 통하여 제공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③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견인
- ④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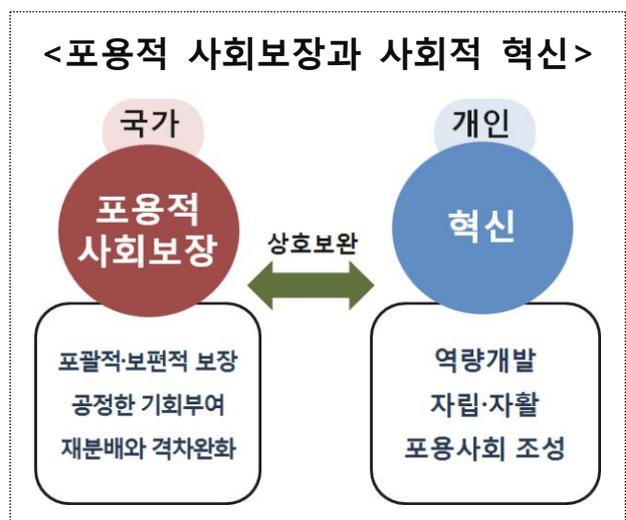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 (원칙)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의 상호보완

-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 추구
-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확충
 - 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 활용하여 관련 투자를 촉진

4 포용과 혁신(국가와 개인)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포용과 혁신의 관계)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의 혁신 기반 제공
 - (포용적 사회보장)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조정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제공
 - (혁신능력 제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기반위에서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혁신을 통한 성장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에 기여
- (국가와 개인의 관계) 사회통합·혁신에 상호보완 및 협력
 - 사회통합의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역할
 - (기본생활 보장) 삶의 핵심영역(소득, 고용, 건강, 돌봄)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공정한 기회부여) 건강 및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혁신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
 -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의 근로능력을 활용한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
 -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노력



4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방향

증장기
목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 : 28위 ('17) → 20위 ('23) → 10위 ('40)

* OECD 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4대 핵심분야 목표

고용·교육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 '17년 22.3% → '23년 18.0% → '40년 15.0%

-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상대빈곤율 완화 : '17년 17.4% → '23년 15.5% → '40년 11.3%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건강수명 연장 : '16년 73세 → '23년 75세 → '40년 78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GDP대비 투자비율 확대

: '15년 5.7% → '23년 7.4% → '40년 10.7%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12대 중점 추진과제

고용·교육 분야

1.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소득보장 분야

4.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5.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6.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건강보장 분야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8. 필수의료 보장
9.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회 서비스 분야

10.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11.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12.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참고1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40)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3 ('17) ▶ 15.0% ('40)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빈곤율 완화 17.4% ('17) ▶ 11.3% ('40)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수명 연장 73세 ('16) ▶ 78세 ('40)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5.7% ('15) ▶ 10.7% ('40)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IV.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0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75세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10만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1/3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1,800시간대로 단축



2,000개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계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7만명 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확대



20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30만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42만명

117만명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117만명으로 확대

334만가구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 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40% 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40%까지 확대

229개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

V.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고용·교육 보장 분야

저임금 근로자 비중* (%) : 22.3 ('17) → 18.0 ('23) → 15.0 ('40)

* 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

- ◆ 평생학습참여율(%) : 35.8 ('17) → **40.4 ('23)**
- ◆ 고용보험 피보험자(만명) : 1,343 ('18) → **1,500 ('23)**
- ◆ 연간 노동시간(시간) : 2,014 ('17) → **1,800시간대 ('23)**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①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 보육·교육 투자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까지 확충('21년),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18년 2,720개→'23년 5,000개)등 **기초학력 보장 강화**

*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18년 36만명→'22년 53만명)으로 **초등돌봄 공백 해소**

②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 고교 무상교육 실현('21년 전면시행)등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등을 통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 반값 등록금 수혜 기준(중위소득 대비) : 120%('18년) → 130%('19년)

- 특수교육 대상자, 학업중단 학생,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③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 * '22년 직업계고 전체 실시, 일반고 제도 도입 추진
 - 국립대학을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인재 양성*
 - * '22년까지 과학기술 인재 4만명 육성 지원

④ **평생학습 체계 구축**

- 학점은행제,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 문해교육 지원 확대('22년 누적 64만명),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22년 누적 45,000명)
-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폴리텍)
 - * 신중년 경력설계 서비스 참여자 : 2.8만명('18년) → 5만명('22년)
-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제 확산 및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확대
 - *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자 수 (고졸이하 청년 '17년 24.3% → '22년 26%,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비율 '17년 '10.8% → '22년 14%)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가입 활성화
 - *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 : 1,343만명('18년) → 1,500만명('23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 중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종사자 임의가입 허용('23년)
 - * 재해입증 가능성, 수급 관리방안, 재정소요 추계 등 연구추진('19)

②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동시에 확대해 생활안정 도모
 - * 지급수준 10%p 인상(現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現 90~240일 → 120~270일)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 방안 중장기 추진

③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년)으로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60% 이하), 청년층(중위소득 60~120%)의 취업 촉진
 - * 사회적 대화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제도설계·근거법령 제정 추진('19.상반기)
- 구직의지가 높은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수급자를 중심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
-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도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지원('23년 10만명 추가혜택)

④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누적) : 9만명('18년) → 38만명('22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누적) : 15만명('18년) → 51만명('22년)
- 지역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가능성 확대
-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접근성·체감도 향상
 - * 취업, 창업, 복지, 주거, 금융 등 162개 청년정책 안내 및 실시간 상담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①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현장안내 강화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17.5만명('18년) → 20.5만명('20년)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원, 3개월),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를 신설('19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충, 대체인력 지원강화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육아휴직자중 남성 비율 : 17.8%('18년) → 21%('23년)
- 사회 각 부문에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의 적용대상 확대 검토
-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및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 교육을 통해 고용 상 성별 격차 완화
- 폴리텍,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부가가치 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 재취업 지원 강화
- 아동양육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8년 6.4만가구 → '22년 12만 가구)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소득 하위 90% → 100%)

③ 일하는 방식 개선

- 연간 노동시간을 단축('17년 2,014시간→'23년 1,800시간대)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 근무혁신 10대 제안, 근무혁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추진

소득 보장 분야

상대빈곤율(%) : 17.4 ('17) → 15.5 ('23) → 11.3 ('40)

- ◆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만명) : 89 ('18) → 47 ('23)
- ◆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 : 48.3 ('17) → 52.0 ('23)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 비수급빈곤층 축소('18년 89만명→'22년 47만명)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20년) 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여부 검토**
 -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의료 '22.1월)
- 인구구조 고령화, 1인 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현행 4인가구) 변경 방안 검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보유재산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방안 중장기 검토
 - * 급여별 기준선(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②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 자활급여 단가 현실화*, 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자활참여 탈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특례 도입 등 **자활성공 보상 강화**
 - *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19년)

③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19~'21년)
-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지원 확대여부 검토(~'23년)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유도

- 소득·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현행) 166만 가구, 1.2조원 → ('19년 개편) 334만 가구, 3.8조원 예상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19년)으로 청년층의 생활안정 도모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19년 8만명)

* 만 18~34세 졸업·종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①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소득하위 20% 어르신('19년), 소득하위 40% 어르신('20년), 소득하위 70% 어르신('21년)

②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저소득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 강화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개선(현 30→40%), 분할연금 분할방식 변경(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급여분할→이혼시점에 소득이력 분할), 최저혼인기간 단축 등(현 5년→1년)

- 사회적 논의를 통한 연금제도 개선

* 사용자, 노동자, 청년층, 노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논의

-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위험 자산 투자 확대), 주주권 행사 및 책임투자 활성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및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추진

③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 주택연금 대상 확대, 수급의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추진

④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확대

*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64세)의 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확대 : 51만개 ('18년) → 80만개 ('22년)

건강 보장 분야

건강수명(세) : 73 ('16) → 75 ('23) → 78 ('40)

◆ 건강보험 보장률 (%)	: 62.6('16) → 70.0('23)
◆ 예방가능 사망률*(%)	: 30.5('15) → 25.0('23) *중증외상환자 기준
◆ 흡연율(%)	: 18.5('16) → 14.0('23)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확대

* 건강보험 보장률 : 62.6%('16년) → 70%('23년)

** 비급여 본인부담 : 13.5조원('15년) → 4.8조원('22년)

-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 도모

②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 마련,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23년 3,600개소)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①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확충*
*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23년)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22년 운영목표) 등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②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
-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및 표준운영체계 마련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15년 30.5%→'23년 25%)
-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③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

-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부처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④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7개) 지정·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20년)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19년 8개→'23년 100개)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22년, 4개소) 및 심리재활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①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66개소('18년) → 250개소('23년 목표), 방문건강전담공무원 '22년까지 3,500명 확충

-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 건강관리 대상 가구 : 110만 가구('18년) → 약 300만 가구('23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방문 간호사가 통합사례관리 수행

② 건강위해요인 관리

- 흡연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금연 대책 강화**
- 금주구역 지정 등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강화, 고도비만자 치료 지원 등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③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및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배치(1,075명),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 **자살예방**을 위한 **소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 마련**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자살사망자 7만명 전수조사(~'19년),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 5.7 ('15) → 7.4 ('23) → 10.7 ('40)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 8.0('17) → 10.0('23)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 25('18) → 40('21)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6.3('16) → 9.0('23)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비율(%)	: 6.8('17) → 10.5('23)

1.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① **(노인)**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양수급률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정식개소,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장기요양수급률: 8.0%('17년) → 10.0%('23년), 치매환자관리율: 36.2%('18년) → 54.4%('22년)

②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2,500명('19년) → 7,000명('22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4,000명('19년) → 22,000명('22년)

** 특수학교·학급: 174개교, 10,325학급('18년) → 197개교, 11,575학급('22년)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5개소('18년) → 20개소('21년)

③ **(아동)**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2년 내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공('19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 8.3만명('18년) → 12만명('22년)

***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19년)하여 종합적·체계적 아동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④ **(취약계층)** 현행 동절기 위주 에너지 복지체계를 하절기*로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 냉방지원('19년) : 하절기(6~8월)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 상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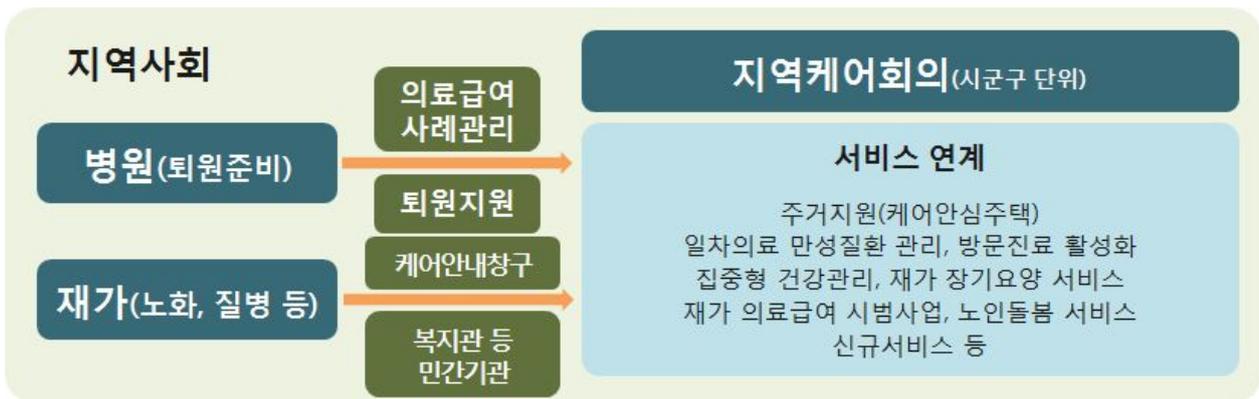
*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 7만원('18년) → 10만원('22년)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모형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선도사업 추진*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 8개소 대상 추진('19.6월~'20년)
-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로 케어안심주택(4만호), 주민건강센터(시군구별 1개소) 등 통합 돌봄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소)

<예시> 노인 통합 돌봄 모델



②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 병원과 지역(읍면동)이 협력하여 환자 입원 초기부터 퇴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 지원
 - *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23년까지 2천개)하여, 퇴원 전 종합적인 환자 평가-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지원
-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 의료급여 퇴원자가 집에서 의료·간병·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도입 및 단계적 확대

③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 마련*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19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서비스('22년)
-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위기가구 지원 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등 장애인 맞춤형 이용체계 구축('19.7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선도사업 모델 개발 추진('19년)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① 어린이집·유치원,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취원률 40%까지 확충
- 공립 요양시설 및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 단계적 확충 추진
* 요양시설 16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84개소('22년)
- 민간 시설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

② 적정 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급여 강화

-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주거급여 보장수준* 강화
*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6.3%('16년) → 9%('23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95만('18년) → 130만('22년), 최저주거수준 주거생활에 적정한 기준임대로 설정 추진

③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종합재가 서비스 직접 제공
*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19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
-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강화

④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커뮤니티케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 34만개('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일자리 : 15만개('22년)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립·운영** 추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진입·퇴출 관리 기제 강화, 제공인력 자격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 최저기준 수립 등

- **사회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추진

* (예시) 사회복지종사자 1일 8시간 월급제,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개선(2교대→3교대), 상해보험 가입확대, 상습가해 이용자 제재 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 검토

추진 기반 (인프라)

◇ **사회보장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기반 마련**

1 사회투자 확대

- (현황)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 지출규모는 경제규모·인구고령화 등 요인을 고려한 국제비교 시 약 52~68%에 불과
 - GDP 대비 국민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도 모두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 25.2%(32위, '15년), 미국 26.2%, 독일 37.0%, 일본 30.6%, OECD 33.7%

** 한국 40.6%(36위, '15년), 미국 71.8%, 독일 67.2%, 일본 71.4%, OECD 56.4%

- (추진방향)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204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
 -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15년) : 한국 10.2%, 미국 18.8%, 독일 24.9%, OECD 19.0%
 - 사회투자는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육성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의 동력
 - 사회보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재원 확보계획 마련(국가비전2040)

2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추진

- (현황) 지역 내 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한 공공복지이용체계 개편 및 공공센터 확충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대응에 한계
 -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개인의 욕구에 따른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등에 대응하는 근본적 개혁 필요

○ **(추진방향)** 부처간 사업연계 및 중복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체계의 연계성 제고***

* 각종 공공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내 서비스 이용체계 역할조정 및 연계 방안 등 마련

- **(연계기반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가구방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 위기발굴 체계 구축**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확충: 19.3만명('18년)→35만명('22년)

- **(이용체계 연계)** 지역사회의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사례 관리 확대*, '공공센터' 간 **연계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Lead Agency)** 구축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대응하여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신설 추진

** 시군구 단위의 **지역케어회의** 운영으로 대상자에 대한 종합욕구사정 및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건강·고용 등 분야별 중추기관 지정

③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현황)** 現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급증한 복지급여·서비스 처리에 치중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방대한 정보제공 기능 미흡

○ **(추진방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행정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 기반 마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19~'21년) 및 시스템 개통('22년)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 멤버십'** 추진

* 사업별 신청주의에서 포괄적 신청주의로 제도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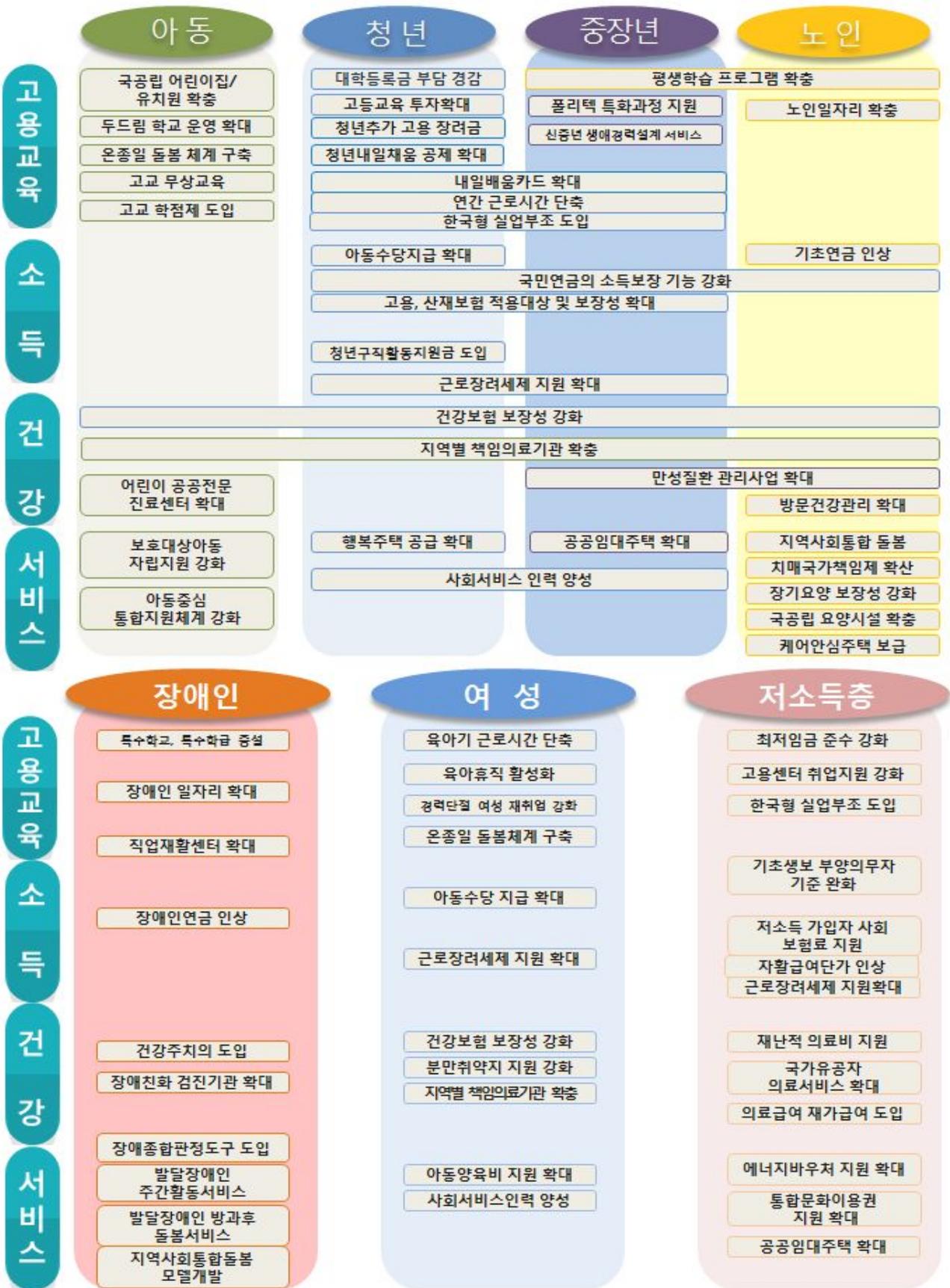
-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치정보에 기반한 **사회보장 수요(이용)·공급체계 지도 구축**

- **(빅데이터 관리강화)** 사회보장 빅데이터에 대한 **총괄관리기능***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 확립, 데이터 품질검증 체계 구축 등

- **(과학적 정책분석)** 각 부처, 기관이 보유한 행정 빅데이터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 및 정책수립·개선 지원

* (예)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EITC 등 수급자 현황분석 및 빈곤 탈출효과 분석



VI.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중 총 투자 규모는 약 332.1조원으로 추계

(단위 : 조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2.1	54.9	62.5	67.1	71.3	76.3
보편적 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교육	68.9	12.4	14.1	14.1	14.1	14.2
	소득	119.6	18.8	21.2	23.6	26.4	29.6
	건강	38.1	5.7	6.8	7.8	8.8	9.0
	사회서비스	105.5	18.0	20.4	21.6	22.0	23.5

* 기본계획에 포함된 90여개 세부과제의 예산 포함(일반회계, 기금, 지방비 및 건보재정)

** 국민연금재정 등 일부 미반영 상태

*** 구체적인 투자계획 규모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소요재원은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 기존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

-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 기존사업 지출 효율화를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검토

○ 사회보장정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VII. 향후계획

□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

□ 핵심과제 중심으로 연도별 중간점검·사후평가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 및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 (지출수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2%로('15년), OECD 평균(19.0%)와 단순비교하면 약 53.7% 수준

<사회보장지출의 국제비교(GDP대비 %, 2015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10.2	26.3	32.0	24.9	21.9	21.6	18.8	19.0

* 사회복지지출 : 일반정부지출 + 사회보험

○ 주요 선진국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전체인구의 14%, 18년)과 유사했던 시점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높지 않음

<고령화율이 14% 수준인 시점의 주요 선진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구분	핀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비교년도 (노인인구비율%)	1995 (14.3)	1990 (14.0)	2015 (14.6)	2010 (14.2)	1995 (14.3)
공공사회 복지지출(%)	28.9	24.3	18.8	17.5	13.3

□ (증가속도) 최근 10년간('05~'15)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5.3%)보다 2배 빠른 속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05~'15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11.0	3.4	3.3	2.3	2.6	4.8	5.3	5.3

I. 고용·교육 보장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1-1.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	교육부, 복지부	1-1
②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	1-2
③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1-3
1-2.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①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1-4
②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교육부	1-5
③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여가부	1-6
1-3.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		
①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	1-7
②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	교육부, 과기정통부	1-8
1-4. 평생학습 체계 구축		
①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교육부	1-9
②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	고용부	1-10
③ 중소기업재직자 훈련 지원	고용부	1-11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2-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1-12
②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장성 강화	고용부	1-13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2.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① 지급 수준과 지급기간 단계적 확대	고용부	1-14
②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도입	고용부	1-15
2-3.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부	1-16
②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고용부	1-17
③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확대	고용부	1-18
2-4.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고용부	1-19
②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고용부, 산자부	1-20
③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고용부	1-21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3-1.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① 최저임금 준수 현장안내 강화	고용부	1-22
②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고용부	1-23
③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부	1-24
3-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①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1-25
②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고용부	1-26
③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	고용부	1-27
④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검토	고용부	1-28
⑤ 가이드라인 교육 등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	여가부	1-29
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고용부, 여가부	1-30
⑦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여가부	1-31
⑧ 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1-32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	------	------

3-3. 일하는 방식 개선

① 연간 노동시장 단축	고용부	1-33
②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고용부	1-34

II. 소득 보장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	------	------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부	2-1
② 중위소득 산출 가구기준 변경 검토	복지부	2-2
③ 보유재산 기준 완화	복지부	2-3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 검토	복지부	2-4

1-2.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① 자활성공 보상 강화	복지부	2-5
--------------	-----	-----

1-3.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① 기초급여액 인상	복지부	2-6
------------	-----	-----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2-1.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재부	2-7
----------------------	-----	-----

2-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고용부	2-8
----------------	-----	-----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3-1.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복지부	2-9
---------------	-----	-----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3-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① 실질적 소득보장 강화	복지부	2-10
② 연금제도 개선	복지부	2-11
③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복지부	2-12
3-3.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① 범정부 협의체 구성	복지부	2-13
②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고용부	2-14
③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위	2-15
④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농림부	2-16
3-4. 노인일자리 확대		
① 민간 노인일자리 확대	복지부	2-17

Ⅲ. 건강 보장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및 관리강화	복지부	3-1
②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복지부	3-2
③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복지부, 금융위	3-3
1-2.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	3-4
②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	복지부	3-5
2. 필수의료 보장		
2-1.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① 권역·지역 책임의료체계 마련	복지부	3-6
②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복지부	3-7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2-2.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①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구축	복지부	3-8
②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복지부	3-9
③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복지부	3-10
2-3.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		
① 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대비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	3-11
②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복지부	3-12
2-4.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①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복지부	3-13
②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복지부	3-14
③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국가보훈처	3-15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3-1.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복지부, 행안부	3-16
②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	3-17
3-2. 건강위해요인 관리		
① 금연 대책 강화	복지부	3-18
②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3-19
③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복지부	3-20
④ 환경오염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3-21
3-3.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①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복지부	3-22
②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복지부	3-23

IV.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1-1. (노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복지부	4-1
②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복지부	4-2
1-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① 발달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복지부	4-3
1-3. (아동)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① 보호대상 자립지원 강화	복지부	4-4
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여가부	4-5
③ 공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복지부	4-6
1-4.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완화 및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접근성 제고		
① 에너지 복지체계 확대	산자부	4-7
②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체부	4-8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2-1.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발	복지부, 행안부	4-9
②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등 인프라 확충	복지부, 국토부	4-10
2-2.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①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	복지부	4-11
②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	복지부	4-12
2-3.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① 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4-13
②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4-14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3-1.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①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복지부	4-15
② 공립 임대주택 확대	국토부	4-16
③ 주거급여 강화	국토부	4-17
3-2.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복지부	4-18
②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복지부	4-19
③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4-20

V. 추진기반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사회투자 확대		
1-1.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		
① 지역사회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행안부, 복지부	5-1
② 공공센터 간 연계성 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 구축	복지부	5-2
1-2.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① 사회보장 빅데이터 총괄관리 기능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부	5-3
②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	복지부 등 범부처	5-4